

민주, 탄핵·특검 장외 여론전… 대여 강공 전환

내일 '김건희 특검 TF' 출범 주말 서울 대국민보고대회도 이상민 탄핵 추진…'이재명 맞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태스크포스(TF)'를 내달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과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 성격의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공으로 전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 TF가 공식 출범한다.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대통령 호위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국가 위기이자 국민 불행이다. 더구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대체 언제 수사할 건가"라며 "도이치 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야당이 연구한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의 공판검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공세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공격에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배량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단 1초라도 책임감을 갖고 살펴보고 바라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으로 신독재국가로 폭주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의 위기는 철저히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전 정권 지우기와 야당 때려잡기 뿐"이라고 질타했다.

최고위원들도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지금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몇 년 후 나와 내 아내가 죽을 것이라 미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퇴임 후 안전 보장 조치를 위한 선제타격인가"라며, "그런데,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나"라고 특

검을 촉구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아내의 혐의는 공판검사가 폭로했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야당 당대표 혐의는 범죄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은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적 흉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기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실이 굳이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게 아니라 떳떳하게 해명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응이다"며 "그걸로 모자란다면 이번 기회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강공 모드 전환을 밝혔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장외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의 연달은 검찰 소환조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과 불공정을 부각하며 국면 전환에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성식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檢 부당해도 대선패자로 오라니 또 간다"

2차 소환 출석 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승자에게 발길질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나.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된다. '답정(답을 정해두고)기소' 아닌가. 기소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합리적인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차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며 "수사 자체가 모욕을 주기 위한,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증거 인멸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인사하는 정진석과 이재명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

野 단독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與 집단 퇴장

野 "농가 안전장치" 대 與 "포퓰리즘" 여야 합의 안돼 본회의 상정 미지수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전 심의 법안이 됐다.

다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투표 직전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쌀값이 폭락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예만 국민 세금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

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인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 불확실하다.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 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의원 119명,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소선거구제 개편

여야 국회의원 119명이 30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 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며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며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전체모임과 운영회의를 열고 공개토론회·원의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퇴행적 정치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

가 여러분들이 공감하듯 승자독식 선거제"라며 "의원모임 목표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대화타협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헌신"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16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면서 "합의로 해서 장벽을 뛰어넘는, 한꺼번에 뛰어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넘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어제 (전날 운영위원 18명 회동에서) 쟁점 분야별 300명 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오프라인 모임뿐 아니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 같은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함께 하도록 당분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역 뿐만 아니라 원외지역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정치권 전반의 의지를 폭넓게 규합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며 "시민사회계도 보수 진보가 합쳐져 있다. (내달) 14일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한다. 시민사회계와 연대와 공존방안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000억 예비비 재가

2월 난방비 부담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책정된 800억원에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고 예비비 지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특히 잘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31일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국무총리가 주재해 예비비 지출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2월 난방비로 중산층과 서민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